## [ 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대비 전범위 모의고사 노동법1,2 정오표 ]

1. 노1 제3문 해설 정답 오기 수정

 $\bigcirc$   $\rightarrow$   $\bigcirc$ 

2. 노1 제5문 해설 및 정답 오기 수정

 $\oplus$   $\rightarrow$  ②

<해설> ① 근기법 제6조 ②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,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8.9.25. 선고 2006도7660 판결). ③ 근기법 제7조 ④ 근기법 제5조 ⑤ 근기법 제10조

3. 노1 제12문 문제 보기 예문 ①번 전단 삭제 및 해설 오기 수정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채불총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(근퇴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포함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.

〈해설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(근퇴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(근기법 제43조의4 제1항)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임금등을 체불하고,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(근기법제43조의4제1항)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(근기법제43조의7제1항). ④ 근로자는 사업주가 1년동안임금등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수가총 3개월이상인경우에 해당하는경우법원에 사업주가지급하여야하는임금등의 3배이내의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수있다(근기법제43조의8제1항). ⑤ 근기법제43조의8제2항

4. 노2 제30문(전체 79) 해설 정답 오기 수정

 $\oplus$   $\rightarrow$   $\oplus$